주요 정책토론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고령화시대 대비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1997년 8월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고령화시대 대비』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음. 그러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는 달리 사회복지부문은 경제발전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국가의 장기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사회복지부문 등에의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부족함.
  - 4대 사회보험의 경우 내실화를 위한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부문에서의 당면과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라는 양적인 문제와 함께 복지의 생산적인 역할과 기능확보를 통한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임.
  - 전국민 사회보험의 조기정착,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 및 일반국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되,
  - 현행 사회복지제도에 내재해 있는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함.

- 이와함께 급격히 도래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사전대비하기 위하여 고령화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심층분석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야 할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가차원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함.

-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1997년 6.3%),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노년부양비가 1997년 현재 8.9%이나 2030년에는 이 비율이 29.8%로 늘어나 생산연령인구 3.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욕구 증대, 주거시설 및 의료수요가 급속히 증가되며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육성 등이 주요과제로 등장할 것임.

현재 최저생계비의 90% 수준인 생계보호비를 1998년까지는 100%가 되도록 하고 2000년까지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한다.

2. 주요 추진과제

가. 비용효과적인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정립

– 현재 최저생계비의 90% 수준인 생계보호비를 1998년까지는 100%가 되도록 하고 2000년까지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함.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 중앙의 복지행정기능중 단순·집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지출의 부담이 작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에 포괄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함.

–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민간주도의 모금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공동모금제도로 육성함.

나. 효율적 사회보험 관리체계의 구축

– 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의 일원화
  - 보험료 부과시 실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피용자에 대하여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함.

공적 의료보험의 보충적인 민간 의료보험 및 퇴직연금보험의 활성화, 산재보험의 경쟁체제 도입 검토 등 사회보험 분야에 민간보험 역할을 증대한다.

- 자영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소득파악률을 고려하여 피용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함.

– 정보연계체계의 구축
- 사회보험제도간 전산망 연계구축을 통하여 중복수혜 및 부정수혜 등 비효율성을 제거함.
- 정보연계체계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

  제1단계: 각 제도내에서 직장·지역조합 및 지방사무소간 정보공유로 자격 및 징수관리 효율화

  제2단계: 사회보험제도간 정보공유를 통해 급여부문까지 조정범위 확대

  제3단계: 사회보험정보센터 구축으로 정보관리의 통합 및 총괄

–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내 경쟁원리 도입
- 지역조합의 경우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생활권별 거점 조합을 중심으로 인근의 지역조합을 통합하도록 추진하며, 통합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소규모조합으로 일정기간 누적적자조합은 강제통합함.
- 직장조합은 개별 사업장이 대진료권내의 공동직장조합을 3년주기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등 경쟁원리를 도입함.

다. 사회보험 분야에 민간보험 역할 증대

– 공적 의료보험의 보충적인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 공공보험이 적용되기 어려운 진료부문(예,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 및 법정본인부담액에 대하여 민간보험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음.

– 퇴직연금보험의 활성화
-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적극 추진함.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성 제고, 의료보험의 재정건실성 확보 등 건실한 사회보험재정을 확립한다.

– 산재보험의 경쟁체제 도입 검토
  -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에 대한 민간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함.
    1) 기업들이 기존의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운영)과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2) 현재의 산재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보상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민간보험제도를 설계하여 기업자율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산재보험의 경쟁체제 도입여부는 현행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의 관리효율성 비교·검토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음.

라. 건실한 사회보험재정의 확립

–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서 도시지역 자영자확대에 대비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할 예정임(1997년 10월).
  - 국민복지기획단에서 건의(1995년)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수급부담구조의 적정화와 연금기금운용의 효율화로 요약될 수 있음.
    1) 보험료, 급여수준은 세대간 소득재분배, 가입자의 부담능력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으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
    2) 연금수급연령은 인구 고령화, 정년연장의 변화 등을 감안해 조정하고, 수급연령에 따라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운용수익률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함.

현행 정년기준의 상향조정, 직업재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고령자 적합직종(현재 40종) 확대를 통한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의료보험의 재정건실성 확보
  - 총량적으로 보험급여지출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보험료 인상 등을 통하여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 질병균별 정액진료비 지불제도 확대 및 소액진료비에 대한 정액공제제 도입을 검토함.
  - 왜곡된 수가체계의 구조조정(상대가치수가체계 도입 등)을 통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므로 급여비지출의 경제성을 제고함.

마. 고령화시대의 대응방안

– 고령화시대의 정책적 함의
  - 고령화는 노인 개개인의 건강, 소득, 여가활용 등의 문제와 함께 연금·의료비 지급증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부양비율 증대 등으로 사회전체의 생산성 감소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까지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연금제도의 정착등으로 고령자의 소득계층 분화가 심화되고 실버산업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발생할 것임.

– 평생공부·평생근무체제 확립
  - 현행의 정년기준(60세 등)의 상향조정, 직업재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고령자 적합직종(현재 40종) 확대를 통한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함.
  - 노인능력은행, 고령자 인재은행 등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재고용 근로계약을 통한 근무연장제도 도입을 유도하여 산업체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률에 따른 우대조치를 강화함.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 노인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할 민간조직을 육성하며,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함.

– 실버산업의 육성
  -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된 실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혜택, 택지공급의 지원, 노인용품의 개발지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장기요양시설의 확충
  - 중증 치매노인이나 와상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되 정부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이들 시설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및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검토함.

실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세제상의 혜택, 택지공급의 지원, 노인용품의 개발지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